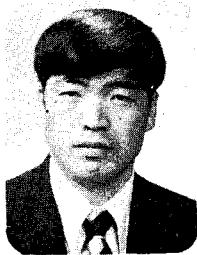


養鷄產業 安定化方案



이 유 방
(KIST 축산가공연구실장)

1. 緒 論

지난 1년 동안 업계의 뜻있는 많은 분들이 양계산업 안정화 방안을 논하였고 1980년 대는 양계 산업을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 까지 가장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안정화 내지 체계화 시킬 수 있는 씨스템의 개발과 이익 추진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누구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겠다. 특히 사료를 비롯한 생산재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은 생산, 유통, 판매의 모든 분야에서 경비의 절감과 최대의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생산, 사료, 부화, 유통처리, 판매의 제 분야가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제 각기 독립되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여건하에서는 생산효율 제고나 산업의 안정을 기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양계산업 관련 각 분야는 유기적으로 체계화 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체계로 하루 빨리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또는 시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機構)와 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고에서도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기구, 자금, 대책(방안)의 순서로 간략하게 논해 보고자 한다.

2. 養鷄產業 전담기구의 설치

모든 산업은 점차 분업화 내지 전문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국내총 축산물 생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양계산업 분야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 까지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이 기구 내에는 채란, 육계, 종계, 부화의 세 전문부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채란 전담기구를 예로 들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지방에는 도채란 위원회를 중앙에는 전국채란위원회를 둔다. 도채란위원회는 각 도내의 집약적 양계단지를 5개 내외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선출된 생산자 대

표 5~7 명과 도축정 대표 1 명, 축협지부 대표 1 명 등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업무 집행부 (專務制度)를 두어 계란선별포장센타의 운영, 계란의 일원화된 판매 및 광고, 생산 조정의 감독,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한편 전국채란위원회는 각도 채란위원회의 생산자 대표 9 명과 농수산부 대표 1 명, 축협중앙회 대표 1 명으로 구성하여 중요 시책과 업무를 의결하고 그 산하에 업무 집행부를 두어 수급예측, 조사통계, 생산조정, 공급조정, 안정기금 조성 및 관리, 소비촉진, 난제품 수입허가 심사, 장기시책 기획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용역 사업등의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또한 양계산업 관련 분야인 사료, 약품, 연구기관 및 대학, 소비자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 교환과 자문을 통하여 양계산업 방향 및 정책설정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 난가사정위원회는 양계 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사로서 구성하여 계란 생산비를 조사하고 계란가격 산출 공식을 작성한 다음 가격상승 요인이 생길 때마다 적정 난가를 산출, 고시하는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또한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개선, 소비촉진, 계산물 품질향상 등의 그때 그때 당면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육계 및 종계·부화 부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전담부서를 두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양계전담기구의 특징은 다수의 생산자 대표와 소수의 정부대표로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생산자 자신들이 중요 시책이나 업무를 결정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는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금융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형태인 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채란, 육계, 부화·종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업무를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집행부를 어디에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인가이다. 물론 전문인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 이겠으나 오늘의 현실에서 지나친 기관의 난립은 혼선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새로이 발족하는 축산협동조합·중앙회에 양계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전문인을 고용하여 정부의 간섭이나 지나친 인사 이동이 없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므로서 양계전담기구는 관료적이 아닌 생산자 자신들의 기구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 단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정부와의 협력하에 산업 전체의 장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홀륭한 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3. 양계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영

양계산업의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데는 자금이 필요하다. 즉 공급 과잉시 수매 비축이나 가공처리, 소비촉진, 방역사업, 생산조절, 각종 연구 및 조사 사업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바 이에는 정부의 정책자금, 제도적 금융과 생산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안정기금의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금융자금은 국가 재정이나 산업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제외하겠고 다만 생산자 스스로가 조달할 수 있고 안정 기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금은 양계산업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의 경우 2 가지 방법으로 거출되고 있다. 즉 닭 1 수당 얼마씩 부과하는 levy system 과 계산물의 처리시점 (도계장 또는 선별포장센타)에서 단위물량당 일정액을 거출하는 check -off syste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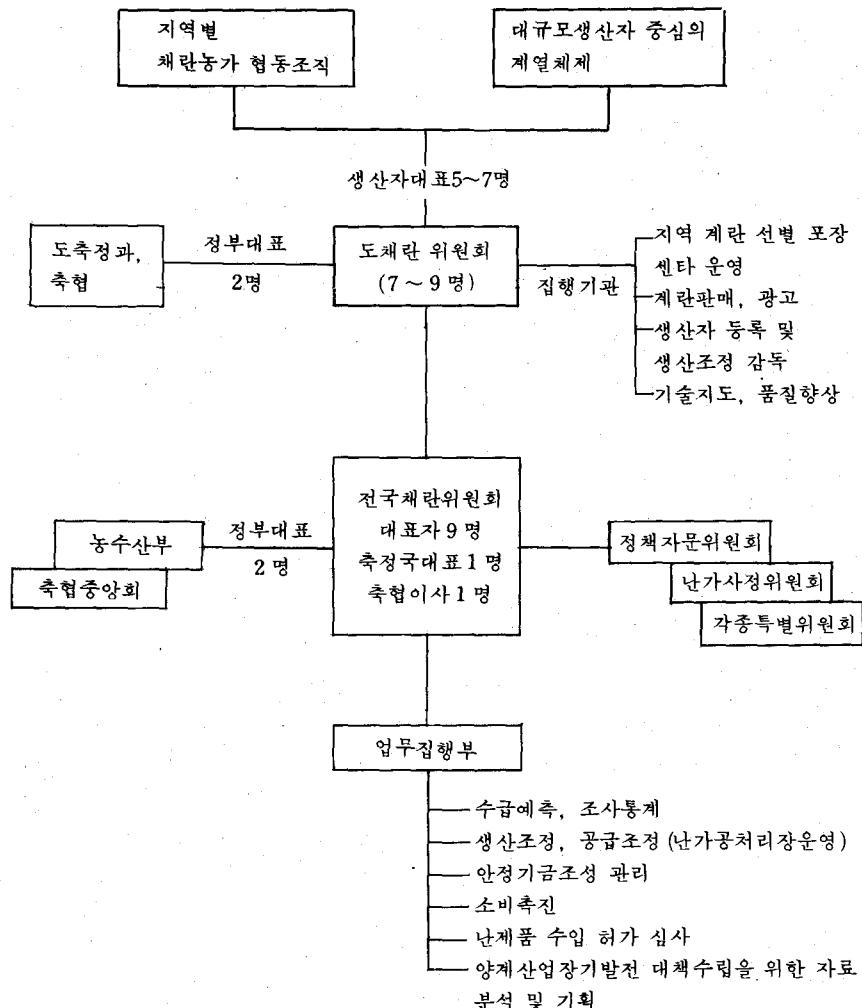


그림 1. 채란전담기구의 조직과 기능

한국의 현실은 위의 두가지 방법의 어느 것도 채택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계산물유통이 아직 질서있게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생산자 등록이나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계산물 단위수량당 일정액씩 거출하는 check-off 방법이 이상적 이지만 유통 조직이 체계화 되기 까지는 잠정적으로 양계배합 사료에 일정액 (0.5~1%) 을 부과, 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다.

이) 부과금은 사료제조 업체가 판매 가격에 포함시켜 거출하여 양계전담기구에 이전토록 하며 생산자는 이를 생산비에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기금조성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는 양계전담기구가 공청회나 홍보물을 통하여 생산자에게 그 목적과 취지, 운영방식 등을 주지시킨 다음 생산자 투표에 의해 $\frac{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제도화하고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하면 될 것이다.

KIST에서 전국 양계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약 60%가 기금조성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40%의 약 반은 기금조성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합리적 운영관리 여부에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계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생산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홍보된다면 대부분의 생산자가 찬성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기금은 주로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 공급 조절을 위한 수매비축, 각종 연구 및 조사사업, 생산조정사업 등에 사용 되도록 한다.

4.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몇 가지 시책

1) 생산조정

과잉 또는 과소생산을 지양하고 계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생산이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등록 및 쿼터제(割当制) 실시와 같은 강제성을 통제방식이 있고 계열 생산을 통한 경제자율적인 조절방식이 있겠다. KIST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생산자가 생산자 등록 및 쿼터제, 생산자 조직이나 민간 기업에 의한 계열 생산 체제에 적극 찬성하고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생산 조정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생산조절에 대한 양계업자의 의견

생산조절 방식	찬반비율
1) 생산자 등록제 및 사육수수쿼터제 실시	찬 76% 반 24%
2. 생산자 협동조직을 중심으로 한 계열생산체제	찬 55% 반 45%
3. 민간기업에 의한 계열생산체제	찬 64% 반 36%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경제 체제이고 처음부터 강제성을 띤 생산수수 할당제를 채택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대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겠다.

(1) 1 단계 대책 : 종계장 및 부화장의 규제강화—국내의 1000수 이상의 양계 업자가 8500여호에 달하여 이를 대상으로 생산조절을 하기는 현단계로서는 어려운 일이므로 생산자 등록 및 계열화 방식이 정착되기 까지는 우선적으로 현재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시행이 극히 미흡한 종계장의 등록과 부화장의 허가제도를 강화하여 규제 및 단속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 이를 위하여서 종계 등록 의무규정 강화로 정확한 통계 유지와 숫자를 매월 공고하고, 종계입식 수수를 전담기구를 통하여 업계 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절되며 다시에는 판의 개입으로 조정하며 무허가 부화장의 조사 및 즉각적인 영업정지 를 단행하고 부화·종계장의 시설 기준 강화로 기준미달 업체를 정리하여 부화장과 종계장을 점차적으로 일원화 시킨다. 또한 부화장의 부화 수수 보고 의무규정을 강화하여 초생추의 정확한 통계유지 및 이를 공고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계전담기구에 의한 수급 예측과 적정 수수에 근거하여 종계 및 초생추의 과부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조정토록 하되 감독관을 두어 철저한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의무규정 불이행업체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2 단계 대책 : 양계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생산조절 및 계열화 생산체제 유도.

1000수 이상의 채란계와 연 5000수 이상의 육계생산업자는 의무적으로 양계 전담기구에 등록토록 하여 정확한 사양수수의 통계를 유지하고, 전국 양계전담기구는 수급예측에 의한 적정수수를 산정하여 현 보유수수와 비교,

검토한 다음 과부족에 따른 생산 조절을 道전 담기구에 통고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지나친 생산확장을 감시, 고발토록 한다. 한편 으론 양계산업 지역을 단지화하고 생산자 협동조직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계열생산체제를 장려, 유도 하므로서 생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계열생산에 참여하고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시설의 균대화를 위한 과감한 금융지원, 세제상의 혜택, 방역 및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한편 미등록업체는 철저히 규제토록 한다.

(3) 3 단계 대책 : 생산자 등록 및 생산

수수 할당제 실시.

상술한 2 단계 대책은 생산자동록 만을 의무화했을 뿐 생산수수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인데 만일 얼마간의 시행기간을 통하여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생산자 등록은 물론 사양수수를 할당하므로서 강력한 생산조절을 법으로 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유통 조직의 개선 및 공급조정

(1) 채란업

계란의 유통구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 즉 생산자로 부터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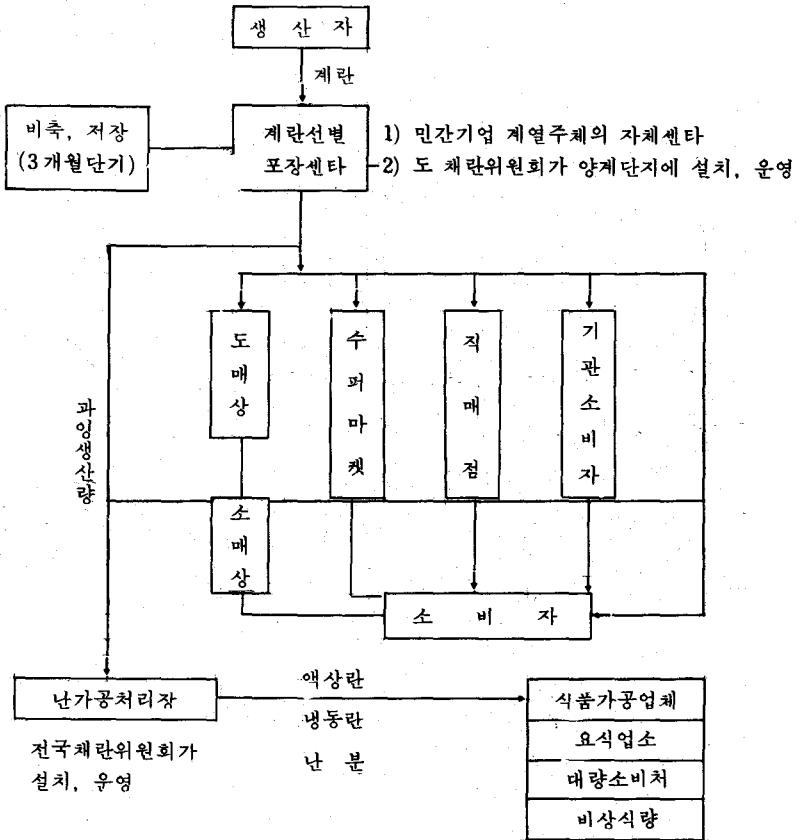


그림 2. 계란의 유통구조

산된 계란은 민간계열주체가 적영하는 선별 포장센타나, 道 채란위원회(혹은 축협)가 설치, 운영하는 선별포장센타에 집하시켜 세란, 선별, 포장하여 도매상, 수퍼마켓, 기관소비자, 적매점등에 일원화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생산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생산과잉이나 수요부진으로 공급 과잉되는 물량에 대해선 일부는 선별포장센타에 병설된 보관 시설에서 2~3개월 단기간 보관하고 그 이상의 과잉 물량은 전국채란위원회가 운영하는 2~3개의 난가공처리장에서 할란, 살균하여 액상란, 냉동란, 분란 등으로 만들어 연중 평준화된 가격으로 대량소비자와 식품가공업자에게 공급 토록 한다. 계란선별포장센타에서, 가공처리 공장 및 부수되는 시설 설비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응자가 요청된다. 또한 생산자는 센타에서 처리, 판매되는 계란에 대해 일

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므로써 센타의 운영, 응자금의 상환, 소비시장의 개척 등에 충당하도록 한다.

(2) 육계업

육계의 유통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계유통과 생산-소비를 직결시키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물량공급에 충분한 도계시설을 민간자본의 유치와 정부의 투자로서 설치하고 생계수집을 위한 수송수단, 판매조직의 체계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요구에 따라 응자해 주도록 하며 만일 민간유통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시설 투자하여 육계 전담기구(또는 畜協)에서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도시 지역에서 위탁도계만을 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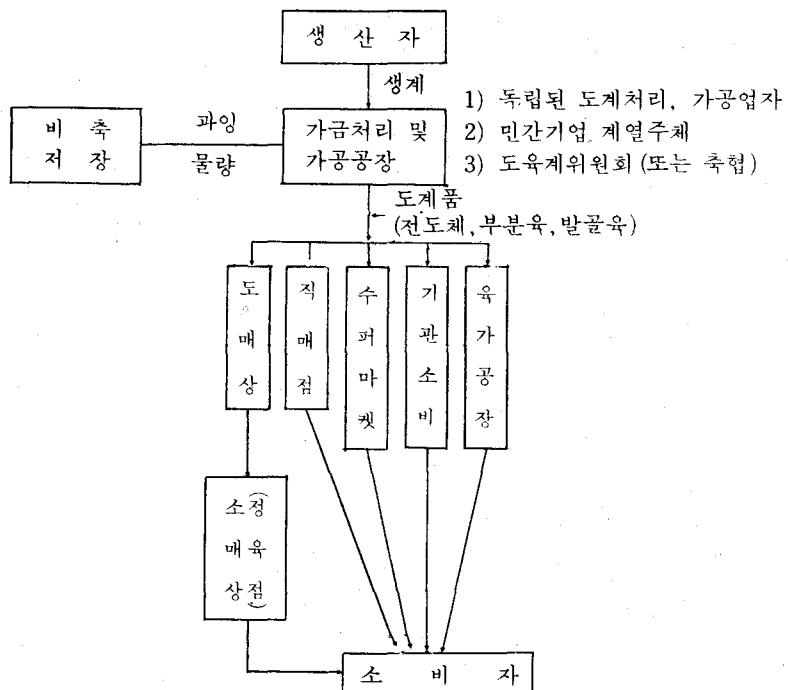


그림 3. 육계의 유통구조

가금처리장의 경우 생산—처리—판매를 직결시킬 수 있는 유통주체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되 이것이 불가능시에는 이를 육계 전답기구가 인수하거나 생산자 협동 조직과 정부의 공동투자로 별개의 처리장을 설치하여 생산—소비를 직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도제품은 가급적 냉장된 상태(0~4°C)로 하여 농협공판장, 일반 정육점에서의 취급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냉장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어디나 팔 수 있도록 자유화하되 유통주체는 제품이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 중에서 품질의 저하나 변질이 없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한다.

생계상인에 의해 유통은 잠정적으로 허용하되 도제시설이 충분히 설치되고 위생적으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존의 생계 소매점을 철저히 규제, 단속하고 일단 처리된 도제품의 도매상 혹은 소매상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조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생산비 이하로 하락될 때에는 대규모 처리장으로 하여금 수매 비축도록 하되 소요되는 자금은 안정기금으로 충당한다. 또한 과잉물량은 중간 처리하여 육가공장에의 원료육으로서의 공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3) 소비촉진

(1) 유통조직의 체계화와 공급조정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마진을 최소화하며 계산물의 구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2) 계산물의 규격화와 등급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3) 제품의 다양화로 조리와 급식에 편리하도록 한다.

(4) 호텔, 음식점, 단체급식 장소에서의 급식에 용이하도록 가공 처리하여 공급하므로 소비처변을 확대한다.

(5) 계산물과 한방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명하여 새로운 섭식 방법을 개발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한다.

(6) 수동 및 기계발골육을 생산하여 육가공품 원료육으로서의 이용을 촉진한다.

(7) 생산효율 및 유통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계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최저화 하므로서 다른 동물성 식품과의 비교 우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8) 국영방송, 매스콤,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도제품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제도한다.

(9) 양계전답기구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양계안정기금으로 충당한다.

4) 생산효율의 향상

사료를 비롯한 생산재, 인건비의 계속적인 앙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효율의 향상이 절실히 요청된다. 생산효율의 향상은 계산물 가격을 인하시키고 아울러 양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므로서 양계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1) 계열생산체제의 정착화

생산자협동조합과 민간기업이 계열 주체가 되어, 명아리, 사료의 공급, 계산물 처리, 유통, 판매 및 공동 방역의 기능을 담당해 주므로서 생산자는 안심하고 사육에만 전념케 하므로서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점차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계열생산체제는 생산효율의 향상 뿐 아니라 유통의 합리화, 생산조정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생산체제라고 하겠다.

(2) 방역대책

국내의 닭질병수는 33종으로서 급성 전염병

및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450~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총 생산액의 약 15%에 이르고 있다. 이 엄청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산업체의 공동 노력으로 법적 전염병의 박멸, 급성전염병의 방역, 실용제 생산원인 종계 및 부화장의 철저한 방역, 사료위생과 안전을 통한 방역, 도계 검사를 통한 병제 유통방지, 올인·올아 웃씨스템의 도입, 방역기구의 강화, 연구 조사 및 홍보활동의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요청된다. 보다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위해서 농수산부의 정책적 지원과 가축 위생연구소와 보건소의 기술적 지원하에 축협내에 민간방역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양관리 개선

정부는 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조정, 품질개선 및 안전성의 향상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의 개정과 아울러 독립된 사료 검사소를 설치하고 도입사료원료 및 국내 단미 사료의 품질검사, 등록된 배합사료의 성분분석, 미생물 및 독성물질의 검사를 통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증된 사료가 유통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료유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업체는 품질과 가격, 그리고 양계업자에 대한 아프터서비스와 신용으로서 경쟁을 해야 할 것이고 종전과 같이 외상이나 유통질서를 흐리는 영업수단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육업자와 계열주체는 철저한 기장 기입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료를 선택하고 펠렛사료, 주문사료, bulk수송 등 사료비 절감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활용해야 할 것이며 양계협회는 사양관리개선을 통한 사료

비절감 방안을 교육, 홍보하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생산시설 근대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전술한 생산조정, 계열생산체제의 정착화로 생산자에게 적정이윤이 보증되므로 시설 근대화를 위한 투자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기계·설비의 관세 인하와 아울러 국내 축산기기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육성이 지원되어야 한다.

(5) 양계업자의 직업의식 쇄신과 경영합리화 추진

양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80년대는 두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농장에서 과학적인 양계와 경영의 합리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양계인 전체가 업계의 전전한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들이 주체가 되어 전술한 양계전담기구 설치 및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로 하여금 유통시설·생산시설의 근대화와 방역에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공동노력과 협동이 두번째 과제이다. 이 두 과제는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두번째 과제에 대해선 하루 빨리 업계의 의견을 집약화하여 구체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5) 양계정책.

축산물 생산액의 45%를 차지하는 양계업은 그 어느 축산부문보다 정책 면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는 좋게 말하면 양계업은 방임해 두어도 잘 되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라 볼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양계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적

고 국회의원들의 표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일반 농가에서 부업으로 하는 양돈이나 축우의 가격은 농가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 표와 연결될 수 있으나 농가부업 양계는 가축단위가 적기 때문에 계산물 가격의 하락이 농가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국회의원 표와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보겠다.

이체 정부는 불필요한 통제나 지나친 개입도 지양해야 할 것이나 무관심한 방임 내지는 무정책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양계 정책의 기조는 생산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 내지 시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금융적으로 적극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겠다. 통제가 아닌 유도, 간섭이 아닌 협조, 방임이 아닌 지원이 요청되는 것이다. 몇 가지 요청되는 양계 정책을 들면,

(1) 양계안정법의 제정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안정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① 양계전담기구의 설치—독립적인 기구로서, 축협내에 양계전담부서의 설치
- ② 양계안정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
- ③ 생산조정을 위한 생산자등록제의 실시 및 부화·종제장의 규제
- ④ 방역체제의 강화와 민간방역기구의 설치

(2) 계산물 유통시설 개선을 위한 적

극적인 금융지원

(3) 양계생산의 단지화 및 계열화 촉진을 위한 세제상 및 재정적 지원

(4) 방역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및 방역요원의 훈련

(5) 세율의 현실화 및 재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5. 結論

이상으로 안정화방안은 논의해 보았거니와 본 방안은 그 동안 여러 뜻있는 분들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종합한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공동 노력으로서 하루 빨리 가장 적절한 안정화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 자신들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채란업계, 육계업계, 부화·종계업계 대표들과 학계, 협회, 연구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적절한 안정화 방안을 수립한 다음 이를 전 양계업계에 의견을 물어 수정·보완한 다음 최종안을 정부와의 협조하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80년대는 작게는 자기농장의 경영 합리화, 크게는 업계 안정화를 위한 종합장 기본계획(마스터 플랜)의 개발과 이의 추진이라는 대명제를 위한 공동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